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9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9
연구보고서 16-48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9
연구보고서 16-48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인쇄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1663-8 94320
978-89-322-1072-8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요약집은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획·수행한 협동연구 사업의 중국종합연구 총서 요약문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원문은 www.kiep.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간사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정책연구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한 지 다섯 번째 해입니다. 올해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8개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국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의 5개 중점연구주제는 국내 중국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이러한 5가지 중점연구주제에 따라 8개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금년도 과제에는 본원을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향후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8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정택**

차 례

발간사 ····· 5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9

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강재) ····· 10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 17

2.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 18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 27

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 28

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이현주) ····· 33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 39

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 40

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 46

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52

8.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 58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6년 ····· 63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1

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강아람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권수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보령
북경공상대학 양지엔하이

□ **중국과 대만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구축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설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에 활용할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인력양성과정 및 지불보상체계에서 전통의학·현대의학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 의료이원화체계가 야기하는 비효율성과 의료전문직간 갈등에 직면한 우리나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에 기여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공급주체로 인정하여 현대의학과 별도로 구분되는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체계를 운영한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전통의학의

보유 자체는 기회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이원화체계는 배타적인 면허영역을 설정하고 직역간 교류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함으로써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전환,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의학'의 창출 등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의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직역간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부담과 의료전문직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관계설정'이라는 고민을 경험하였거나,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이원화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전통의학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 상호 교차교육의 강화를 통한 직역간 갈등 해소와 융합 활성화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인력양성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전통의학 및 현대의학 교육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두 학문의 이해 제고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의약대학 및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상대 학문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중의약대학인 베이징중의약대학의 경우 교과과정 가운데 약 35~40%를 현대의학과정에 배당하고 있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고등의과대학 중 99개 대학에 중의약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히 중국에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동시에 학습하여 두 의학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결합의'가 존재한다. 중국의 모든 중의약대학에는 공통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중서의결합 기초'와 '중서의결합 임상' 과정을 운영한다. 중서의결합 의료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서의결합 의료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 의료이용량에서 차지하는 중서의결합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량 역시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대만은 중의과대학에 8년제의 '복수과정'을 두어 상호 교차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의학과 서의학을 동시에 전공할 수 있는 '이중면허'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복수과정을 통한 상호 교차교육의 확대는 대만의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면허자들에게는 진료과정에서의 현대의학·중의학 동시 진료행위 및 의료기기 활용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이원화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한방의료정책에서 보장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의서비스 및 약재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공적의료보장체계 개혁 동향 파악의 의의가 있다.**

- 중국은 필수적이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약제를 소비자부담이 완화된 가격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개혁
- 대만은 중의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지불제도의 제도적 기제들을 도입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의료보장체계에서의 지불보상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공적의료보장을 통한 보상이 해당 행위 및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행위와 약제가 필수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상 방식과 규모는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 모두 최근 공적의료보장체계에서 중의약 보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혁조치가 있었다. 특히 중국의 사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에서, 대만의 사례는 세 번째 측면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다.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운영하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 분포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의료서비스보다 약제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약재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의료기관·제약기관의 뿌리 깊은 이윤구조는 가격상승과 소비자부담 증가의 원인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료보험 개혁에서는 ①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이고 ②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③ 합리적인 가격과 사용 편의성을 갖추고 ④ 현대의약과 중의약을 동일하게 중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제를 보험체계로 편입하였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기본약물'로 지정, 이들에 대한 공적보장을 가동하되, 이 기본약물들에 대해서는 가격과 의료기관별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보편성과 소비자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층의료기관에서는 기본약물을 100% 사용해야 하며, 대형종합병원인 3급 병원에서는 그 비중을 25~30%는 되도록 최소기준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본약물에는 가격상한을 설정, 제로마진을 구현하여 의료기관(의료인)·제약기

관 간의 이윤구조를 해체한 것이다.

대만은 중의약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적보장체계에서 '성과연동지불제도' 요인들을 도입하고 있다. 중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자의 '분석보고서' 작성과 '지급보류액'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분석보고서는 중의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질적 수준 평가라는 점에서, 지급보류액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배분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성과연동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공급자의 질 분석보고서 등을 수가조정에 반영하여 2017년부터 최대 +4%~-7%까지 보상차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인력양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시사점

■ 교차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통합적 일원화를 구현한 중국은 물론이고 유사한 의료이원화체계를 운영하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전통의학의 거리감과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한의과대학에 복수전공 또는 의과·한의과 협력전공 과정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복수전공 과정 이수자에게는 이중면허자격 취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의 진료 또는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분야에 한정하여 현대의료기기 활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두 의학의 협력 물꼬를 트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의과·한의과 협진의 내실 있는 추진**

현재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과·한의과 협진은 이제 출발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협력진료'의 유형과 수준 등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급여화 시범사업과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활용한 의과·한의과 협진의 다양한 모형을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정부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의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의료의 질 개선정책들로부터 한의과분야에서도 선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을 지표화하고, 기관별 정보를 공개하며, 개선하는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2

2.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오선정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정선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윤종석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이준구
중국 노동관계학원 왕칸
중국 중산대 루오스치
중국 수도경무대학 멍췐

□ 거시 노동환경, 13·5규획기간 중 불안정할 전망

- 최저임금인상률 하향조정 시작, 그러나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압력은 여전해
-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이 핵심 과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 빈발 가능성
- 기존의 공회와 사회주의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구식 노사관계제도 부분도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른 임금인상은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불가피한데, 그것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무한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공의 경우도 1980년대, 1990년대생 이후 세대는 도시에 정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용관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 향상과 빈번한 이직은 결국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빠른 임금인상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고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도입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중심 전략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노동 NGO 활동을 억압하는 등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공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특색을 갖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고, 또한 자기 재생산의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센젠을 비롯한 광둥성 지역 일각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회 직선제와 서구식 단체교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중국 내 일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와 기존의 억압적 노동정책 사이에서 끝없이 불안정한 정책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

후한 것이 13차 5개년 계획시기가 될 것이다.

□ **제조업 주요 업종별, 지역별 매트릭스 연구 접근법을 통해 볼 때 중국산업의 구조조정과 약진, 한국 주력산업의 고전 속의 분투가 두드러져**

-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 사례와 광둥성 및 장쑤성 사례 종합연구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제조업에서 초기 발전전략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와 신발, 완구, 그리고 가전산업 등은 이제 빠른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광둥성의 에어컨과 컴프레서 기업이나 장쑤성의 가전기업들, 그리고 역시 장쑤성의 섬유의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도 규모가 크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변화의 압력을 받아 주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동화 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업체들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거 동반진출해 있는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들에서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내세운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에 비하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왔으나, 최근 1~2년간 SUV 시장 확대 속에서 창청, 창안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그 영향으로 베이징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 혹은 물량 축소 등의 경우가 여러 분야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온 자동차 A사 사례, 여전히 수출물량이 확보된 휴대폰 A사, 그리고 TV에서 모니터와 노트북 생산으로 핵심 품목을 변경한 5장의 A사 사례 등은 모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동차 A사의 원키

트시스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부문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생산을 유지하는 한 관련 부품업체들의 생산활동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더불어 관련 부품업체들을 함께 방문조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의 고충과 희망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운명공동체로서, 이들은 생산성과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기업들을 따라잡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4장의 휴대폰 A사 생산라인 단축이나 3장 자동차 A사 3공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기업들 역시 부단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수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금융이나 물류가 아닌 가치사슬의 중류인 생산부문 자체의 경쟁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조선산업이다. 6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산업이 2010년 이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관리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품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양적 성장 중심전략하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중국 조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감소 속에서 한 대형업체를 파산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에서 인력부문의 역량 제고 전략은 부각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성별, 지역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광둥성과 장쑤성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지역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최초의 경제특구인 센젠시를 비롯하여 상하이에 인접한 난징과 쑤저우, 쿤산 등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들이라고 할 것이다. 두 성은 산업과 노동 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광둥성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전국의 농민공들이 대거 몰려들어, 현지인과 외지인이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온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장쑤성은 순안 모델로 명명되는 지방정부와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이러한 순안 모델은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모델과도 다르고, 저장성의 원저우 모델과도 다른 고유성을 지녀왔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계층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 신장을 배경으로 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식의 상승과 단체행동의 빈발에 대해 장쑤성 정부는 공회를 통한 이익대변을 추진하면서도 집단쟁의에 대한 억압중심정책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노사 자율교섭 관행을 갖고 있던 광둥성 모델이 대조되지만, 최근 1~2년간 광둥성에서도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공산당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중상수준의 임금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내 혁신노력과 포섭적 노무관리 관행 발전**

- 자체적인 인사노무 역량이 발달한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국 내 법인들은 가치사슬상에서 중류의 제조부문이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인건비의 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평판대로 서구나 일본계 기업보다는 임금수준이 다소 낮고, 대만계나 로컬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산업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계절적 수요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계 기업 모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 비전형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파견비율 10% 규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다소간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는 파견에 대한 규제 속에서 한국기업들은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 기본 목적이 정규직의 채용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와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들은 상위 직급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차지하여 한국 본사와 조율된 경영을 하기에 용이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지 관리자들의 승진 비전은 제약되는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컬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덜 발달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전개되어온 인사관행을 무매개적, 무비판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기업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석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인상률이 2016년 들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속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연안지역에는 인력난이 나타난 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억제정책과 무관하게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에 상응하여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장은 한국계 기업이든, 중국계 기업이든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본사 공장의 더 빠른, 더 체계적인 혁신 메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에서 이식된 혁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은 중국 공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의 혁신에 대한 동참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고용관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전략이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방침이라면,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근로자 포섭적 전략은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중국 당국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과 인건비 억제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의 불안정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미 중국 사업장에서 파업을 경험한 한국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노무 리스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업원 복지와 고충처리 등을 통한 개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를 통한 집단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중국 당국의 정책이 공회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공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상급 공회가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공회나 당 간부들과의 '꽌시' 형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과는 달리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공회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공회를 결성하고 있지조차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중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거친 노무관리를 통해 반발을 사는 경우, 허술한 인력관리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주재원 사전교육이나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주재원에 대한 파견 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에 대해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3

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장현미·이주원
상하이항만해운발전중심 류자이민
상하이해사대학교 양빈
우한이공대학교 왕장충
다롄해사대학교 왕뉘
쑤저우젠슝대학교 중민

□ **중국 13·5계획 추진에 물류효율화, 물류인프라 및 국제대통로 건설 등에 따라 우리 정부 및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중국의 12·5계획 동안 물류분야의 성과와 평가를 수행하고
- 중국의 13·5계획기간 중 물류분야의 계획을 분석하여 향후 변화를 분석하고
- 이에 따른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활용방안 도출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

용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13·5기간 중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 등 5대 발전이념과 공급개혁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결하고 뉴노멀 시대에 부응하는 물류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 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13·5계획 추진에 따라 물류인프라 구축과 물류산업 정책방향에 의해 중국 내 물류산업 및 물류구조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운기업의 구조조정과 항만인프라 구축 및 재편에 따라서 우리 해운 및 항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택배물량의 지속적 증가,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하수운의 발달, 지역별 대형 물류센터의 건설 등 우리 물류기업에는 사업확장 및 신규사업 추진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13·5계획기간 동안 해운, 항만, 물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운분야는 13·5기간 동안 해운대국 육성 추진**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항만분야는 항만효율성 확대,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등 추진**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

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 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 개편 등 소프트웨어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장 큰 위협요인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 방지에 따른 선박 입출항 제한, 기회요인은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사업 기회 등**

중국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 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첫째 터미널간 이동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 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온라인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 지역들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4

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이현주·이백진·어은주
전(前) 국토연구원 김원배
헤이룽장 당대중러지역경제연구원 송쿠이

□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 정상은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계획요강」을 통해 초국경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중국이 추진하는 6대 경제회랑 중 하나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간 연계를 통한 공동번영을 배경으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6월에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 30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계획요강(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함으로써 6대 경제회랑 가운데 최초로 다자간 협력회랑으로서의 합의를 이루었다.

□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관련 계획을 중국 동북 3성과 다자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동북 3성 중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훈춘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자무스-통장, 수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满洲里)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二连浩特)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의 다자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2001년에 총 9개의 교통회랑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이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고 있다.

□ **2016년 중·몽·러 3국간 합의된 사항을 교통인프라와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개발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분야 사업은 철도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으로 이 중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이 포함되었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의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인프라의 도로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분야의 3국 협력은 현재 합의된 사업의 대부분이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변동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경제협력구)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등의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에 포함되는 여러 국가에 자국 주도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 중 하나로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 간 초국경 경제협력구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2국 1산업단지, 2국 2산업단지 등 다양한 모델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역

내 지역 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노선을 살펴보면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장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연해주 II) 개발이다. 또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노선(연해주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몽·러 3국이 기존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 현대화 사업을 통해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인프라 건설사업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 간 철도 연계사업, 수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공동개발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

표준 및 관련 제도 통합분야에서도 복합물류운송에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 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 기술 등에서의 제도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가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에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 방식으로서 AIIB 수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PPP)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GTI 협력의 틀 안에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이와 같이 중·몽·러 경제회랑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하고 인프라사업을 위한 기업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 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8.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5

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용덕·정성삼·최영선

□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주요 핵심 에너지 정책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문제와 에너지부족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에너지효율 제고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소비 총량 통제, 고효율 기기 보급, 에너지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석탄소비를 통제하는 대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력 등 비화석에너지의 소비비중을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중국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세와 향후 추진 방향

중국 전체 에너지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개 주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괄목할 만한 에너지소비 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에너지효율화에 최적화된 산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점차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건물부문은 2010년에 2000년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해 같은 기간 건물부문 에너지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까지 상승하였다. 중국정부는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난방과 조명 부문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부문에 대한 효율화 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대비 5배 이상 증가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우대정책 등을 강화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은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 기준과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등은 최근 그 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에너지효율화 표준제도는 국제표준과 부합도가 낮고, 표준 이행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제표준에 상당히 미흡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개선이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나라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對중국 진출 및 협력 가능 분야

■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2015년 중국 상무부는 30년 만에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각각 적용되는 외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으로 인하여 복잡했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법과의 통합을 통해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는데, 특히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및 '청정석탄 발전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등의 항목들은 허가에서 장려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외

국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을 없애고, 자유무역구역 내에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절차 간소화, 차별 최소화, 진입장벽 해소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효율 개선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국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기업들의 對중국 효율화 부문 진출 및 협력 가능 분야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는 분야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효율화 기술과 ICT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관련 부문의 진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사업을 11차 5개년계획기간부터 의무화하고 있는데 진단 기술 및 노하우 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분야에는 진단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이상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에너지 진단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앞선 에너지 진단 기술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진출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효율화 부문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우리 에너지효율화 산업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관련 투자와 지원 강화

이러한 진출 유망분야의 실제 진출 도모를 위해서 우선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또한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 중국 진출에 필요한 실무 및 금융조달 지원 강화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절차 지원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부문의 금융지원 차원에서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사업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정부간 협력 확대**

정상외교, 정부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사업의 지속 추진이나 양자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효율 협력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다층적인 양국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6

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전창곤·정정길·지성태·임채환
중국농업대학 한위쥔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세부 내용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 한·중 농업 협력모델 제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역내 44억 명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확대, 금융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는 대부분 농업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산업의 상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 대상지역 선정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부지역의 헤이룽장성과 서부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이 양국간 상호 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방안은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장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이 헤이룽장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고 영업

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은 높기 때문이다.

□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모델

농식품 가공산업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방안으로 먼저 중국 내 협력대상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연구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 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특별 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분야의 한·중 협력사업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유통분야의 협력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 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 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 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의 시사점

■ 양국간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협력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출발

정부는 협력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등 고위험 사업분야에 민간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 기업이 사전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한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AIIB 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참여민간기업 선정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지역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사업

중국 산시성의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사례지역 유통산업분야의 양국간 협력모델**

유통업분야의 협력사업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7

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공성용·이승민·정성운·박선규
중국환경계획원 동잔펑·취 아이위·하오춘쉬·리홍샹

□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보 공유 및 대기오염 실태 파악 등의 기존 협력에서 한발 나아가 한·중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협력으로 심화·발전 필요**

- 주요 대기오염원인 도로이동오염에 초점을 맞춘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우선 도출

현재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 연평균 PM10 농도는 49$\mu g/m^3$(수도권 49.7$\mu g/m^3$)이며, 중국의 2015년 연평균 PM10 농도는 87$\mu g/m^3$(징진지 132$\mu g/m^3$, 장강삼각주 83 $\mu g/m^3$, 주강삼각주 53$\mu g/m^3$)로 WHO의 권고기준인 20$\mu g/m^3$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도로이동오염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2013년 PM10과 PM2.5 배출량에 대해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은 각각 40.1%, 42.7%을 나타냈으며, 중국의 2015년 PM2.5 배출량에 대한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

율은 15~52.1%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하여 양국은 각각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며 대기오염 저감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대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개정과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대기질 개선 및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일 및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질 개선을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지역 차원의 국가간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관측자료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등에 합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는 양국간 자료 공유, 대기오염 실태 파악 및 예측에 치중되어 있고,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 특히 중국의 핵심 사안인 권역별 대기 관리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양국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권역별 대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권역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기회 모색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한발 빠른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 즉 수도권 대기오염 관리를 시작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라는 수도권 대기 관리를 위한 법규를 수립하였으며, 「특별법」 이행을 위한 수도권 대기 관리 이행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별 대기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권역별 대기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 우선적 권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한 지역별 실시 세칙을 수립하였지만 지역간 협력조직체계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및 환경검사), 운행차 관리(노후차 조기폐차), 교통수요 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기준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련 기준,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 및 기타 세부 추진사업에서는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이 적용 중인 제작차 배출기준(지역마다 상이)과 연료품질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후차 조기폐차에 대한 정부보조금, DPF 부착 지원 등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도 미흡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경험의 공유 차원에서 권역별 대기 관리를 위한 법규의 제정 및 실시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관련 기준, 경제적 수단을 비롯하여 기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과 확인

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역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의 협력수요

양국의 권역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관련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수요를 도출해보았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양국 협력 현황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권역별 대기관리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중국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 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 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 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 개발기술 및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협력수요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등이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 저감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의 협력수요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도로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 중국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근본적인 협력의 추진 필요

한·중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은 중국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중국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견인을 한·중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 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 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지급제도, 교통유발 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 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 등의 기술이전/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6-49-08

8.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규·조고운·양평섭·이현태·오종혁
서강대학교 김시중
인천대학교 김부용
국제금융센터 김권식
국민대학교 문익준
경희대학교 이창수
한중경제포럼 정영록

□ 구조조정을 포함한 중·단기 중국경제 현안

우선 중국경제에 접근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 및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과거 고속성장시대에 형성되었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현행 정책들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한 견해이다. 중국은 중·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경제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성장률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및 불확실성의 증가를 전환기 중국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한다면, 한국기업에는 인력·마케팅 등에

서 새로운 형태의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만약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도시화 정책 등이 견실하게 진전을 보인다면 소비재 시장, 서비스업 분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해당 한국기업에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 정책당국의 당면한 불가피할 선택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시도한 모형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 및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 중국의 주식·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2015년 여름 및 2016년 연초에 발생하였던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 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향후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증시 규제 개선·금융개혁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보인다면,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된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어, 향후에는 위안화 환율정책과 금융개혁정책의 연계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지만, 비교적 장기적인 이슈로 판단된다.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과의 관계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데,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외환당국의 역할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위안화 허브전략·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등도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대외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

우선 중국이 내놓은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을 검토하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의 신무역의제분야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제안하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 중서부지역 등 내륙지역의 진출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방안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로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차별화 등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잠재력은 크다. 금융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담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중 전략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지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소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는 편입되어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있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우리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은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므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중국기업이 외국업체를 인수·합병(M&A)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자금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중국의 인터넷 경제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 산업에서 고속으로 약진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는 모습이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은데,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중국은 선전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 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016년

2009~2011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nrcs.re.kr) 협동연구총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2016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09년 협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01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 이장규 외
	09-02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 이장규 외
	09-0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3 / 이장규 외
(산업연구원)	09-04 부품소재산업의 중국시장 분석과 진출전략 연구 / 이문형·김화섭·김석진·김학기·조철
	09-05 중국 부품소재 산업별 지역별 현황과 주요 제조업체 디렉토리 / 김화섭
	09-06 중국 부품소재 유통구조 분석과 주요 유통업체 디렉토리 / 김석진
	09-07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매뉴얼 / 이문형
	09-08 중국 부품소재산업 이슈리포트 / 김학기·조철
(에너지경제연구원)	09-09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1 / 박용덕 외
	09-10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2 / 박용덕 외
(해양수산개발원)	09-11 한중 물류협력 연구(총괄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윤
	09-12 한중 물류협력 연구(별책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윤
(국토연구원)	09-13 한중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 연구 / 이상준·김원배·김동주·정일호·서민호·신혜원
■ 2010년 기초연구	10-01 21세기 중국의 통치방식 변화: 정치·행정·법제의 종합적 분석 / 조영남(서울대)

10-02 중국의 아시아지역전략과 우리의 미래전략구상의 정합성 식별 / 윤덕민(일민연)

10-03 중국의 권력엘리트 충원문화·재생산 매커니즘과 그 정책적 함의 / 안치영(인천대)

10-04 중국 5세대 및 제6세대 지도부 분석과 외교정책 전망 및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 신종호(경발연)

10-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제도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서봉교(동덕여대)

10-06 중국경제의 발전동력으로서의 기업 / 강영삼(서울대)

10-07 중국 산업의 '추격' 전략과 한국기업의 대응 :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 은종학(국민대)

10-08 중국진출 구미·일·한 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중국사업 성공 방안 도출 / 정상은(한남대)

10-09 중국 조선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중소형 조선기업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신정식(보경연)

10-10 한중 양국의 무역결제시 양국통화결제 연구 / 구기보(숭실대)

10-11 한중무역에서 원화 및 인민폐의 무역 결제통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김홍기(한남대)

10-12 중국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고재모(협성대)

10-13 중국 IT 전자사전 발간사업 / 모영주(건홍)

10-14 재중 한인사회 연구 : 코리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 백권호(영남대)

10-15 한중 양국간 문화마찰 해소를 위한 소통모델 연구 / 남종호(한국외대)

10-16 중국 한류의 성과평가와 지속적 확산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 윤경우(국민대)

10-17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 이동률(동아연)

10-18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수용·교육·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문흥호(한양대)

10-19 중국 소프트파워 증진 정책의 뉴패러다임연구 :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 주성일(명지대)

10-20 중국 공산당의 통치수단으로서의 공자산업 활용방식과 전망 / 이강범(중앙대)

10-21 붕괴되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수전 집체 마을의 재생을 위한 연구 / 이병화(농업개발원)

10-22 중-북 접경지역의 도시화와 발전축 형성 동향 / 박인성(한발연)

10-23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 이승률(동북아 공동체연)

10-24 한국의 중국학과 중국의 한국학의 연구추세의 비교분석 / 이규태(관동대)

10-25 일본의 대중국 연구 현황과 시사점 / 김민수(인천대)

10-26 한국내 중국연구 지형도 분석 / 이정남(고려대)

10-27 중국 민사법상 토지용익권에 관한 연구 / 석희태(경기대)

10-28 중국 관광수요자의 권역별 성향분석에 따른 방한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현주(한결한)

■ 2010년 정책연구(I)

10-29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우리의 시사점 -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30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 제품 경쟁력 분석 / 이문형(산업연구원)

10-31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 중심의 한중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0-32 한중간 산업분업 모델 구축과 한국 서해안권의 산업입지 전략 연구: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 권영섭(국토연구원)

10-33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시장 현황과 전망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34 중국행정개혁의 성과분석과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 이재호(행정연구원)

10-35 중국 정책연구 수요조사 / 이재호(행정연구원)

10-36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37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안 / 최수영(통일연구원)

10-38 중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유치 전략 연구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10-39 중국의 개혁개방 항공전략 기초조사를 통한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김제철(한국교통연구원)

10-40 고령친화용품산업 수요기반 강화를 위한 중국시장 연계방안 연구 /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1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지원정책(I) / 김혜영(여성정책연구원)

10-42 국내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 서문희(육아연구소)

10-43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44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 중국 장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45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0-46 중국 12차 5개년계획과 주요산업별 한국의 대응전략 / 이문형(산업연구원)

10-47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48 국내적 제약요인을 고려한 한중 FTA 협상 전략연구 / 안세영(서강대학교)

■ 2010년 정책연구(II)

10-49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 / 백영서(연세대), 강준영(한국외대), 김재철(가톨릭대), 정재호(서울대), 이근(서울대), 김시중(서강대), 임윤선(관동대), 정영록(서울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원), 이장규(대외경제)

■ 2011년 기초연구

11-01 중국의 통상법제와 환경법제의 연계연구 / 손기윤(인천대), 이충훈(인천대), 김호(중, 인천대), 리밍(중, 북경대), 왕진(중, 북경대)

11-02 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 유형추이 분석 / 박성수(세명대), 박주상(대구예술대), 고강(중, 길림공안청)

11-03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의 WTO분쟁사안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 서석흥(부경대), 서창배(신라대), 장지혜(부산외대)

11-04 한중 R&D협력모델 창출방안 연구 / 김완중(동아대), 백권호(영남대), 유병철(동아대), 강준원(동아대), 문철주(동아대)

11-05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 기초조사 / 최규발(고려대), 정지수(고려대)

11-06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 전성흥(서강대), 이동률(동덕여대), 김재철(가톨릭대), 이희옥(성균관대)

11-07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에 대한 연구 / 김태기(단국대), 김진호(단국대), 조한승(단국대), 김학린(단국대), 임재형(단국대)

11-08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노동 법제가 미친 영향력 연구 / 김동하(부산외대)

11-09 중국 기업구조조정(M&A)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윤현석(원광대), 이희성(원광대), 최문옥(중), (중국상해대학)

11-10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 / 이민자(신아시아), 김천규(국토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11-11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대응전략 - IT산업을 중심으로 / 정상은(한남대), 서봉교(동덕여대), 황진영(한남대)

11-12 중국내 분야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 작성(성향별) - 중국내 친한파/친북파 인사관리 / 윤경우(국민대), 은종학(국민대), 양갑용(국민대)

11-13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행위자, 구조, 과정 중심 / 안치영(인천대), 전인갑(인천대), 이남주(성공회대), 장정아(인천대)

11-14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 연구 : 법원을 중심으로 / 조영남(서울대)

11-15 중국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실태 / 고재모(협성대), 권오박(협성대)

11-16 재한 중국유학생 취업실태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문흥호(한양대), 김인(한양대), 민귀식(한양대), 신영미(한양대)

11-17 중국 우주항공 분야정책의 변천과정과 실태 / 김경민(사, 우주정책포럼), 송재익(강남대), 이상현((사)우주정책포럼)

11-18 한중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박상찬(경희대), 이상철(그리스도대)

11-19 중일관계와 일본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전략 연구 / 홍정표(서울대), 이종원(일본릿교대), 김익기(동국대), 공석기(서울대)

11-20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이규태(관동대), 구광범(관동대)

■ 2011년 정책연구

11-21 대 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이승신(KIEP), 곽복선(KIEP), 정환우(KITA)

11-22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 이문형(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오영석(KIET)

11-23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 박용덕(KEEI), 이호무

11-24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 확보 방안 / 최수영(KINU), 전병곤(KINU), 홍우택(KINU), 이기현(KINU), 박병관(INSS)

11-25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성인과 청소년 세대 비교 / 윤철경(NYPI), 오해섭

11-26 중국 동북지구 구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 김천규(KRIHS), 이상준(NYPI), 김흥(NYPI)

11-27 중국대학입시에서의 지역할당제 연구 / 구자억(KEDI), 이준식(성균관대), 박영진(용인대), 이경자(경상대)

11-28 한·중 간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손민정(KICE), 신항수(KICE), 김우석(인하대), 김진공(인하대)

11-29 전환기 중국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 서종원(KOTI)안병민(KOTI)

11-30 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 - 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 유예리(KLRI), 박찬호(KLRI), 이준호(KLRI), 김은환(KLRI), 손현진(KLRI), 이정표(부산대), 양효령(전북대), 마광(중, 절강대)

11-31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 선우덕(KIHASA), 김수봉(KIHASA), 이문형(KIET), 오영석(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11-32 가족변화와 가족지원정책(II) : 중국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김영란(KWDI), 김혜영(KWDI), 장혜경(KWDI), 김은지(KWDI), 최인희(KWDI)

11-33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중국 주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KMI)

11-34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개혁과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KIPA), 이수봉(중), (중국청년정치대)

11-35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 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 / 추장민(KEI), 이윤(KEI)

11-36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 한족과 조선족 비교 - / 서문희(KICCE), 이윤진(KICCE), 최윤경(KICCE), 박금해(중, 연변대)

11-37 중국연구 인벤토리(1999년 이전 자료) / 최호진(KIPA)

11-38 GTI 지역상공인간 교역활성화 방안 / 김진기(강원발전 연구소)

■ 2011년 기초심층연구 (현대중국)

11-39 정치분야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 과정과 변화 / 정재호(서울대)

중국 엘리트 정치와 정치구조 / 김재철(가톨릭대)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동학 / 김도희(한신대)

중국 체제이념의 변화와 계속성 / 이희옥(성균관대)

11-40 경제분야

과거의 유산 / 김시중(서강대)

중국은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만수(동아대)

미래의 도전 / 은종학(국민대)

중국과 세계경제 / 남영숙(이대여대)

11-41 사회분야

중국인의 인간관계 / 김광억(서울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소비와 한류 / 장수현(광운대)

현대 중국사회의 구성: 상업문화 및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정종호(서울대)

중국 문화유산의 정치학 / 장정아(인천대)

11-42 문화분야

中國人論 / 백영서(연세대)

문화 중국과 중국 사상 / 이욱연(서강대)

'中華帝國' 體制와 體制理念의 장기 지속성: 역사학적 접근 / 전인갑(인천대)

사상으로 본 중국인의 국가 구상: 천하일가와 대동사회의 이중주 / 양일모(한림대)

■ 2012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2-0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찬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철(중국인민대학교), 양입웅(중국인민대학교)

12-0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한의학정책연구원), 이준혁(한국한의학연구원), 강승현(한국한의학연구원)

12-0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승호(국립강릉원주대), 김혜영(숙명여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2-0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수현(현대중국학회), 정계영(상해복단대학교)

12-0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朴今海(연변대학교), 白美花(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2-0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박영진(한국교육개발원), 안병환(대진대학교)

12-07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윤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지언(영산대학교), 김도경(인하대학교), 주기평(서울대학교), 심형철(창덕여고), 김어진(쑤저우대학교)

12-0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 〈제1부〉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2부〉 한·중 양국의 여성관리자 활용 비교연구 / 양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환(고려사이버대학교), 방진방(중국인민대학교)

12-0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석(서울사이버대학교), 이천우(중국제남대학교)

중국 법·제도 연구

12-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해용(신라대학교)

12-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홍은기(호서대학교)

12-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강광문(서울대학교),
오일환(중국정법대)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2-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현주(에너지경제연구원), 양광식(한결한주식회사)

12-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일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홍용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성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葛炬(신장농업대학교),
董千里(장안대학교), 许茂增(충칭교통대학교)

12-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노상우(한국교통연구원), 김천규(국토연구원),
장동명(랴오닝대학교), 윤승현(연변대학교)

12-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김원배(중앙대학교),
신태용(서울대학교),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2-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창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王济民(중국농업과학원)

12-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
윤석훤(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3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3-0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현황과 세계화 전략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 고용정책 비교연구 /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3-05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13-06 중국 천인계획 연구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3-07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13-08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3-9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3-10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13-11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3-12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13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 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13-14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3-15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3-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1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 김성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4-01 중국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0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4-0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14-0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4-07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0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14-09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4-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4-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 협동연구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5-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15-0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5-0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5-0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6-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6-02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6-0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6-0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 이현주(국토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6-0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6-0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0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08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663-8
978-89-322-1072-8 (세트)